중대선거구제 도입…다차원 경쟁 막 올랐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앞둔 정치 실험
민주 독점 광주 '다당제 개혁' 성공 관심
소수 정당 화색…민주 '패자부활' 꼼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합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오른쪽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 체제가 견고하게 유지돼 온 광주시가 중대한 정치적 변곡점을 맞았다. 사상 최초로 광주시의회 선거구 네 곳에서 3-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 것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선거구 통폐합을 넘어 전남과 광주를 하나로 묶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거대한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있다. 지역 간 대의성 불균형 문제부터 거대 양당의 기득권, 소수 정당의 생존 전략이 복잡하게 얽힌 다차원적 경쟁의 막이 오른 셈이다.

◇소선거구제 붕괴와 야권 전략 거점 부상

이번 선거구 개편의 핵심은 광주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가 기존 20명에서 24명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1등만 살아남는 1인 선거구 체계가 허물어지고, 유권자는 한 표만 행사하되 득표순으로 다수가 당선되는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가 전격 도입됐다.

시범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인구 밀집도와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남구, 북구, 광산구의 핵심 지역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곳은 신설된 '북구 1선거구'다. 기존 세 개의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돼 4명의 의원을 한 번에 선출하게 된다.

선출 인원이 많아질수록 당선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은 현저히 낮아진다. 이론적으로 15-20% 내외의 탄탄한 고정 지지층만 확보해도 3위나 4위로 당선권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들과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들에게 북구 1선거구를 이른바 전략 거점 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만들었다.

◇투표 효능감 부활과 민주당의 딜레마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제가 낳은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무투표 당선자의 양산과 특정 정당으로의 의석 쏠림 현상이었다. 그러나 3-4인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내한 표가 소수 정당 후보를 3등이나 4등으로 당선시킬 수 있다는 투표 효능감이 부활하며 무당층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강력한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지역의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진다. 중대선거구제는 타 정당과의 경쟁 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후보 간 내부 경쟁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구 1선거구에서 민주당이 독식을 노리고 4명의 후보를 전원 공천할 경우 지지층의 표심은 후보별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조직력과 인지도가 높은 상위 한두 명에게 표가 편중되면, 후순위 후보는 결집력이 강한 소수 정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는 이른바 '팀킬' 현상이 벌어진다.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조직표를 똘똘 뭉치게 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최적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기득권 수호하려는 민주당의 셈법

경선을 며칠 앞두고 선거구 제도가 돌변하자, 기존 입지자들의 반발로 민주당 광주시당은 극심한 내홍에 직면했다. 당내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진 탓이다.

이에 민주당은 불만을 잠재우고 늘어난 의석마저 전석 싹쓸이하겠다는 계산 아래 기형적인 2차 경선, 즉 '패자부활전' 시스템을 도입했다.

개편된 선거구에서 기존 후보자들을 유지한 채 당원 투표로 1차 경선을 치른 뒤, 의원 정수가 늘어난 중대선거구에 한해 탈락자 중 희망자를 모아 다시 투표를 진행해 한 명을 추가 선출하는 방식이다.

본선 기호 배정 또한 1차 경선 통과자들이 상위 기호를 나눠 갖고, 패자부활전으로 합류한 후보는 원칙적으로 후순위로 배치해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치밀한 구조를 짰다.

이는 계파 갈등을 봉합하려는 조치로 포장됐으나 본질적으로는 복수 공천 자제 없이 모든 후보를 쏟아내겠다는 권력 독점 의지의 노골적인 발현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광주에 시범 도입된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 일색의 벽을 허물 사다리가 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의 독점 의지가 제어되지 않는 한 그 효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남광주통합의회' 출범을 앞둔 지금 다당제 협치라는 정치개혁 마중물을 만들 수 있을지, 여전히 민주당 일색의 의회가 될지 오는 6월 광주 유권자들의 선택에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민형배 "재생에너지·AI자율주행차, 전남광주 와야"

광주 기술·전남 인프라 행정통합 이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이재명 정부의 '4대 메가특구'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메가특구의 전남광주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방안은) 기술 패권 시대에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4대 축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부문을 지목해 "이는 제가 설계해 온 미래 전략의 핵심이자, 우리가 전남광주 통합을 추진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전남광주가 가진 독보적인 시너지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광주는 이미 도시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 무대로 만들며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있고, 전남은 전국 최대 수준의 태양광·풍력 잠재력을 바탕으로 RE100 산단과 전력거래 중심지가 될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에너지와 기술, 인프라를 모두 갖춘 전남광주야말로 'AI 인프라 완결형 도시'를 구현할 유일무이한 적임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이번 제안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 효율'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장 준비된 곳, 가장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길"이라며 "전남광주에 두 메가특구가 결합 배치돼야 기업 투자가 산업과 일자리로 직결되는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민 의원은 "전남광주는 누구보다 선명하게 구상했고, 누구보다 절실하며,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제가 앞장서서 전남광주 메가특구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압도적 성공 모델로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수 기자

민주 전남 광역·기초의원 경선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1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광역의원 1곳과 기초의원 23곳의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광역의원 경선은 보성군2선거구에서 강경윤 후보가 이현우·한기섭 후보를 꺾고 후보로 확정됐다.

기초의원 경선 결과가 나온 곳은 목포시 라, 여수시 자, 순천시 가, 순천시 다, 순천시 라, 순천시 마, 순천시 사, 순천시 아, 순천시 자, 곡성군 가, 곡성군 나, 구례군 가, 구례군 나, 나주시 가, 나주시 다, 영광군 가, 고흥군 가, 고흥군 나, 고흥군 다, 고흥군 라, 보성군 가, 보성군 나, 보성군 다 선거구 등 23곳이다.

자세한 경선 결과는 민주당 전남도당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16-17일 권리당원 전화자동응답(ARS) 투표 100% 방식으로 치러졌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 임업·산림 공익지불금 신청 접수

전남도는 19일 "임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해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직전년도 1년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 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이다.

임업직불금 종류는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뉜다. 임산물 생산업은 0.1ha 이상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임가 직불금, 면적 직불금을 말한다. 육림업은 3ha 이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온라인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양시원 기자